

#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文 興 鎬

I. 서론	B.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와 중국 요인
II. 한중 정상회담과 전략적 협력의 확대	IV.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A. 한중 신지도부의 상호 인식과 정책 기조	선순환 조건
B.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의 정책적 함의	A. 한중 전략대화의 질적 제고
III.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기조와 중국 요인	B. 한중 대북정책 공조
A.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기조	V. 결론

## 한글초록

한중 신지도부가 지향하는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전략적 협력의 확대는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고유한 정치·안보적 현실과 북한, 미국, 일본 등 대외적 변수를 고려할 때 한중 전략적 협력 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한의 미래상과 핵문제 해결 방식, 질차에 관한 기본 인식 차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을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정책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양국 지도부의 상호인식과 정책 기조, 한중관계의 미래 청사진인 '한중 미래비전공동성명'의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 내용과 목표, 성공 조건 등을 중국 요인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긍정적 성과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한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대북정책 공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과정에 유용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 전략적 협력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집권 초기의 기대와 이상에 경사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대내외적 노력과 한반도 관련 이해 당사국들의 긍정적 반응 여부가 한중 전략적 협력의 수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하게 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한중관계,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중국 요인

## I. 서론

이명박 정부가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설정한 이후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 논쟁의 핵심은 과연 한중 간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것인가 혹은 한미, 북중 군사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 지도부가 상호 전략적 협력을 새롭게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곧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능력’과 ‘의지’의 측면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사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던 시점에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이 비록 비공식 논평이었지만 ‘한미동맹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한 상황에서 양국 지도자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격상을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 협력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것이었다. 더욱이 당시 이명박 정부는 방중에 앞서 한미 군사동맹을 21세기 가치동맹으로 격상하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외교정책 핵심 기조로 설정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면서도 한국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전략적 협력의 구체적 실천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현 단계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의 한계는 상존하며 이는 단순히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 한미관계 등과 결부된 한국 외교의 딜레마와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박근혜정부, 시진핑체제가 출범하면서 한중관계의 질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전략적 협력의 구체적 실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3년 6월 27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우호적인 정상회담 분위기,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中韓面向未來聯合聲明; 이하 ‘공동성명’으로 표기)과 부속서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이행계획’(充實中韓戰略合作夥伴關係行動計劃) 등을 고려할 때 한중 전략적 협력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전례 없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기대 이상

의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인 호감도와 함께 역대 정부가 시도했던 수사적 한중관계 격상보다는 ‘내실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실용적 현실인식과 공감대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한중관계의 내실화와 전략적 협력 가능성 증대는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안정,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안고 있는 정치안보적 현실과 북한, 미국, 일본 등의 대외적 변수를 고려할 때 한중 전략적 협력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한중 지도부의 인식 차이, 한반도 관련 이해당사국간의 대립은 한중 전략적 협력을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결과는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역내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한중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 여부는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은 물론 박근혜정부의 대외전략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한중 양국지도부의 상호인식과 정책 기조, 한중관계의 미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과 목표, 성공 조건 등을 중국 요인과 결부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긍정적 성과가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한 과제를 한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한중 공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 한중 정상회담과 전략적 협력의 확대

### A. 한중 신지도부의 상호인식과 정책 기초

박근혜 대통령의 2013년 6월 중국 방문이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방중에 비해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 뒤 이은 두 번째의 외국 방문이었고, 당시 북한 핵문제의 난항과 남북한관계 경색,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중관계의 냉각, 박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 유대 등에 대한 복합적 분석과 기대 때문이었다. 사실 한국 내에서도 박대통령의 방중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 특히 신정부의 대외전략 구상의 불가결한 변수로 중국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일본 방문에 앞서 방중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박근혜정부의 대중정책 기초와 관련하여 많은 점을 시사했다.<sup>1)</sup>

박근혜정부의 대 중국 기본 인식과 전략적 판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 수교 이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기존의 양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한중관계의 또 다른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강대국화가 구체화되고 한중간의 비대칭성과 상호인식의 편차가 확대되면서 각 분야에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처방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관계가 한미, 남북, 중미, 한일, 미일 등 한반도 주변 정세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됨으로써 양국관계가 단순한 양자관계에서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상호관계와 결부된 복합적 관계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비정치·민간 차원 교류증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이 확산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경우 한중관계

1) 특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한중간의 정치·안보적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와 신뢰 증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대통령이 방중 슬로건을 ‘믿음을 돈독히 하는 여정’(心信之旅)으로 설정한 것도 신뢰에 기초하여 ‘외화내반’(外華內賓)의 기존 한중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에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 비핵화, 영향력 확대라는 기존의 한반도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 김정은체제와 북핵 문제의 변화 추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 한반도 주변 정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반도정책에 대한 전술적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sup>2)</sup> 특히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과 중국에 대한 상대적 경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남북한관계는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의 긴장국면을 초래했다는 인식하에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정책기조와 부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미운’ 북한을 일단 감싸고 지지한다는 전임자의 전략적 판단을 승계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최상, 최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이 생각하는 최상의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안정적이며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반대로 최악의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불안정하며 중국에 비우호적인 것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핵을 보유한 매우 불안정한 세습 정권이 등장함으로써 북한은 중국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에 근접했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우선 최악의 북한이 출현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결국 한중 신지도부의 이러한 우호적 상호인식과 기존 양국관계의 조정 필요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슬로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양국이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윈-윈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로 ‘공동성

2)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향후 한중관계의 기본 정신을 같이 다음과 강조했다. 첫째, 각자가 선택한 사회제도와 발전 방식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평화적 발전을 상호 지지한다. 둘째, 상호 보완하고(優勢互補) 윈-윈(互利雙贏)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역내의 평화안정을 수호한다. 넷째, 주요 국제·지역문제에서 상호 협력·합작하여 인류의 평화·발전에 기여한다. 『人民日報』, 2013. 6. 28.

명'과 세부 실천 방안은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양국의 구체적 정책 기조가 잘 나타나 있다.

## B. '한중미래비전공동성명'의 정책적 함의

박근혜, 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과 '부속서'는 한중 신지도부의 상호인식과 양국관계의 미래비전,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 필요성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우선 '공동성명'은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반도, 대만,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속서'는 정치 협력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영사분야 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과정의 논의 사항과 '공동성명', '부속서'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안의 내용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최고 지도자간의 상시적인 협의 채널은 물론 청와대 안보실장과 중국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 한중 외교장관간의 핫라인 신설에 합의함으로써 논의 수준과 접근성을 한층 제고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외교적 수사 수준에 머물렀다. 중국의 적극적 변화는 북한의 시대착오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염증과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분석된다.<sup>3)</sup>

둘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일보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대 북한 제재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의 9.19 공동성명 등 국제적 의무와 약

3)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한중 양국이 상호신뢰 동반자(互信伙伴), 발전의 동반자(發展伙伴), 우호협력 동반자(友好伙伴), 평화의 동반자(和平伙伴)로서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 필요성, 가능성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긍정적인 인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人民日報』, 2013. 6. 28.

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 개발 강행이 국제정세의 대세에 역행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중심의 다양한 양자, 다자 회담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어느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만 공식적인 성명이나 표현에서 한국에 완전히 동조하기는 어려운 중국의 ‘고민’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6자회담을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제시하던 중국이 양자, 다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 채널의 가동을 강조한 것 역시 북핵 해법에 대한 중국의 탄력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셋째, 한반도 평화 공영, 비핵화 실현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의 자주 평화적 통일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중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up>4)</sup> 그보다는 1992년 수교 공동성명 제5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중국은 남북한이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sup>5)</sup>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재천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교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입장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정성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

- 
- 4) 중국의 주요 정책 기조 혹은 지도자의 각종 표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관련 정부 부처, 학자, 주요 언론매체의 주관적인 진단과 자기 회망적 예측은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언적, 논쟁적, 자기 회망적 관점에 경사되기보다는 실천적, 합의적,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함께 공동 설계한다는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문흥호, “한일관계의 미래와 중국 요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양립 가능성 모색,” 하영선, 오코노기 마사오(편), 『한일 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서울: 한울, 2012), p. 73 참조.
- 5) “한중공동성명”(中韓聯合公報), 『한중 수교20주년 한중간 주요 연설 및 문헌집 1992-2012』(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2), p. 7.

다가 양국의 신뢰회복 움직임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북핵문제 등 안보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더 나아가 한반도의 자주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Ⅲ.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기조와 중국 요인

#### A.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기조

박근혜 정부의 외교·통일정책 기조는 지속 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다. 그리고 3대 기조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신뢰’다.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이는 역대 보수·진보 정권의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한국 내부, 남북한, 국제사회 차원에서 각각 신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지향한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과제로서 ①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②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③ 대내외 통일 인프라 강화, ④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토대 구축 등을 강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신뢰 모색 단계, 신뢰 구축 단계, 신뢰 제도화 단계의 3단계 로드맵을 설정하고 있다.<sup>6)</sup>

한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깊이 관여 했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프로세스는 유화정책이 아니다. 이는 신뢰프로세스가 무조건 북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안보상의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 지키기’를 하고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평화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신뢰 프로세스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며 남북관계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셋째,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가

6)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32-43 참조.

능한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남북관계가 나쁜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정책이다. 넷째, 신뢰 프로세스는 조건을 걸고 하는 정책이 아니다. 즉 비핵화와 같은 특정 조건을 걸고 그에 진전이 없으면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실천 가능한 신뢰구축 노력을 선행하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전략이다. 다섯째, 신뢰프로세스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신뢰구축과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상호추동하는 관계다.<sup>7)</sup>

이처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정책의 근간이며 강력한 역지력에 기초한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힘의 우위가 평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상호신뢰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조성해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과정(process)을 의미하며 남북한의 일시적 상황전개에 흔들리지 않고 박근혜정부 5년 임기 동안 지속될 것”<sup>8)</sup>임을 강조하고 있다.

## B.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와 중국 요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역대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현실적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문제는 남북한의 신뢰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수단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다음과 같은 추진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단계를 구분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 없이 남북한의 기존 합의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이행하고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상호신뢰를 구축한다. 둘째, 신뢰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호혜적 경제, 사회문화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높은 단계의 신뢰를 구축한다. 셋째, 비핵화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

7) Yu Hyun-seok, “Understand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JPI Peace Net*, No. 2013-21, Jeju Peace Institute, September 13, 2013.

8) 주철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협력 시대,” *JPI Peace Net*, No. 2013-19, Jeju Peace Institute, August 07, 2013.

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sup>9)</sup>

이처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상과 단계 설정이 기존의 대북정책에 비해 점진적,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특정 정권, 하나의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한반도 관련 이해 당사국간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확보가 불가결하며 그 중에서도 중국 요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패에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 중국이 한국의 유연한 대북정책과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강성 대북정책과 미국 중심 외교에 못마땅했던 중국으로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변화 움직임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관계의 단절과 경색이 결국 무력 충돌을 야기했던 상황에서 중국의 최대 불만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 신뢰가 전무하다는 것이었고 그 책임을 북한보다는 한국정부에 돌렸다. 이는 북한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지만 가진 자로서 여유와 포용력이 부족한 한국에 대한 원망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신뢰에 기반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움직임에 호응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지지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인식과 지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잘 나타났으며 ‘공동성명’에서 “중국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半島信任進程)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하여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sup>10)</sup>라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북중관계 차원에서도 중국의 역할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패에

9) 이러한 3단계 신뢰 구축 단계를 약속에 기초한 신뢰 쌓기 단계, 상호이익에 기초한 신뢰 쌓기 단계, 공동체 비전 공유를 통한 신뢰 쌓기 단계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Yu Hyun-seok, op. cit.

10) 『人民日報』, 2013. 6. 28.

결정적이다. 한국이 아무리 신뢰를 강조하고 유연성을 보인다 해도 북한의 의구심을 버리지 않으면 상시적 접촉과 진솔한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정직한 중재자’(honest broker)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더구나 중국의 사심없는 역할을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대체할 국가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비록 기본 인식과 해법상의 이견은 상존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한미 공조가 불가결한 데 이에 대한 중국의 유연한 인식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한미 공조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신뢰프로세스는 오히려 불신의 증폭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공감대와 한국정부의 진정성, 한미관계에서의 균형감에 대한 중국의 신뢰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최대 외교과제이며 그 결과 여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sup>11)</sup> 사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시진핑 지도부가 지지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한미, 미일관계 등과 결부되면 언제든지 악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미국이 아베(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지위권’(collective aggression agreement) 요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같이 미일동맹이 일본의 군사안보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정될 경우 이는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한미공조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을 증폭시킬 것이다.<sup>12)</sup>

11) 박인휘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국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인식하며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두 외교관계가 상호 이분법적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한미, 한중간에 서로 차별적인 영역과 수준에서 호혜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바, 이들 이익을 각자의 국가 이익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면 되는 것이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다가가는 관행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박인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접근 및 국제화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p. 47.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공 조건은 한국사회의 내부로부터 남북한, 국제사회에 이르는 신뢰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에 신뢰가 형성된 상대에겐 이해와 인내를 요청하고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대에게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도모하는 한국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퇴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정책 등을 명백한 대 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3)</sup> 더욱이 중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미일의 군사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 한반도 현안에 대한 단력적 접근을 어렵게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12) 중국은 일본 아베 정부의 행보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전후 일본 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이며 이를 통해 “미일동맹의 성격이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미일이 공동으로 대외적 무력간섭을 도모하는 패권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時永明,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중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 차이나 브리프』, 제1권 제4호, 성균중국연구소, pp. 73-74 참조.
- 13) 비록 미국이 재균형전략을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이 아니고 TPP 역시 중국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미중관계가 ‘전략적 맞수’(strategic rival)가 아닌 ‘건강한 경쟁’(healthy competition)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중국은 2012년 2월 시진핑의 방미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신형대국관계’(new patter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great powers) 관점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EAI 안보넷,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북공진 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EAI 논평』 제29호(2013. 6. 25), p. 2; Jane Perlez and Chris Buckley, “China suggests that U.S., projecting power, is stirring Asia-Pacific tension,” *The New York Times*, April 16, 2013; Jackie Calmes and Steven Lee Myers, “U.S. and China move closer on North Korea, but Not on Cyber espionage,” *The New York Times*, June 8, 2013 참조.

## IV.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선순환 조건

### A. 한중 전략대화의 질적 제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의 두드러진 성과는 지도부간의 신뢰 강화와 함께 주요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 상시적 논의,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이 없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평가 절하된 이유는 외형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형식적이던 기존의 차관급 전략대화 이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무원, 양국 외교부간의 외교 안보 논의 채널을 가동하는 동시에 정당, 국제연구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한중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특히 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세부 실천 과정에서 요구되는 한중협력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 공영을 도모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기대와 지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sup>14)</sup>

사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 의도의 합리성과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정 정권, 국가 차원을 초월한 관련국간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중국 요인은 그 성패에 결정적이다. 한국으로서는 모처럼 형성된 한중간의 우호적 공감대를 심분 활용하여 남북한의 단절과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세부 실천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물론 한중 협력이 남북한의 직접적인 대화에

14) 시진핑 주석은 2013년 6월 27일 정상회담은 물론 6월 28일의 오찬 회동,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발리 정상회담에서는 “6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정세가 완화되었고 남북한관계가 일정한 성과를 얻었으며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한 관계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공감대가 마련되어 무력이 아닌 대화의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 소통, 협조, 합작할 것”임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2013. 6. 29; 『人民日報』, 2013. 10. 8.

우선할 수 없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에만 의지할 수도 없다. 또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전략적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는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들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전략적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반도 평화 공영을 위해 정권을 초월한 중장기적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직급 혹은 사안별로 논의 수준·협력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셋째, 각 부문(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전략적 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전략대화 창구가 가동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 B. 한중 대북정책 공조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상호 촉진과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조건은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공영을 전제’로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는 물론 한중간 전략적 협력의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중국의 불만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관계개선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몰고 갔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가졌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확대해야 하며 이는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sup>15)</sup>

15) 사실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중간의 심도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조영남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① 중국의 전략적 신뢰를 확보하고, ②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미중간의 대립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한편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이후 북중관계에는 몇 차례의 중요한 고비가 있었다. 중국은 북한의 2006년 10월, 2009년 5월 핵실험 강행 이후 6자회담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기존 대북정책의 전환 여부를 고민했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부담’의 경중에 대한 심각한 내부 토론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제멋대로인 북한을 더 이상 두둔할 필요가 없고 완충지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는 과거에 볼 수 없던 대북 인식변화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이런 주장이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결국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적어도 현 단계에서 북한체제의 존속과 남북한 세력균형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도 후순위로 밀렸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북한을 일단 감싸고 지지한다는 기존의 전략적 판단을 승계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최상, 최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무엇보다도 최악의 북한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비록 상징적일지라도 ‘혈맹’의 유대감을 과시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1961년의 ‘중조상호원조조약’ 정신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에는 김정은의 조건부 방중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안보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적 자극, 압박에 대해서도 적극 견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6자회담 결렬로 손상된 자국의 중재력을 복원하고자 할 것이며 북미접촉, 미국의 불가침조약 체결 용의 표명 등을 계기로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sup>16)</sup> 사실 중국은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기

있으며, ③ 한국의 동아시아 다자주의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의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서울: 민음사, 2013), 360-361 참조.

16) 이와 관련하여 이기현은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신사고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중국이 북한의 체제의 ‘생존’을 전제로 ① 북한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 ② 동북아에서 미국과

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수시로 언급해 왔다. 셋째,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며 기존의 나진·선봉, 압록강 하구의 경협 확대는 물론 북한의 경제개혁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정부로서는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 집권기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공조는 남북한의 평화·공영을 전제하는 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남북한관계, 북중관계의 구조적 특성상 양국간의 공조를 저해할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 개인의 전략적 인식과 판단이 그대로 대북정책에 투영되지도 않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중국의 고유한 방식, 절차, 속도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만약 한국이 북한의 대결적인 정책을 구실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에서 벗어나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한다면 중국의 역할은 의지, 능력 면에서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한중 대북정책 공조는 유명무실화될 것이다.<sup>17)</sup>

## V. 결 론

한중 전략적 협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요인이다. 한국과 중국의 신지도부 출범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외교적 수사에 그칠 수도 있는 전략적 협력의 세부 실천을 담보할 제도, 접촉 창구를 구축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동안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유명무실했고 결과적으로 한중관계의

---

의 전략적 협력 공간 필요성, ③ 한국의 전략적 가치 증대, ④ 중국의 국내 여론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북 관리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기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Online Series* 2013-02-25, 통일연구원, pp. 2-5 참조.

17) 대북정책과 관련된 중국의 ‘의지’(willingness)와 ‘능력’(capability)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문홍호,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 북한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pp. 184-185 참조.

‘외화내빈’을 초래했다는 반성과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양국 지도부의 공동 인식에 기반한다.

이처럼 한중 전략적 협력 가능성의 증대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한중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한중 양국의 협력 여하에 따라 양자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통일 이후까지를 고려한 장기적, 안정적 한중 관계발전 구도를 재설정해야 한다. 특히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특정 현안에 편중되기보다 교류협력의 다원화를 통해 양국관계의 저변을 부단히 확대하는 동시에 정치권, 정부 부처, 언론계, 문화계, 학계 등을 총 망라한 실효성 있는 소통 채널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대중전략과 정책기조가 달라지고 애써 구축된 기존의 협력 채널이 방치될 경우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전략적 협력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안정이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한중, 북중, 남북의 삼각구도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서 하나의 관계가 변화할 경우 기타 양자관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들 관계는 예외 없이 매우 복잡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안을 각각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삼각구도의 양성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출발점은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이다. 그동안 한중 전략적 협력이 지지부진했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남북한관계의 경색과 단절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를 한반도전략의 최우선적 고려 사항으로 고수하는 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한중 전략적 협력의 공간을 극도로 제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한중, 한미관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한 탄력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객관적 인식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이 비록 한미동맹의 역사적 연원과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결코 이를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미, 미일동맹을 강화

하는 동시에 여타 아태지역 국가들과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전략을 더욱 구체화한다면 중국은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한국의 정책적 선택지를 크게 제약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선별적 협력과 대립을 반복하는 중·미관계의 이중구조 하에서 영역, 사안에 따라 양자 균형 혹은 일방 경사를 통해 윈-윈의 경계를 확대해가야 한다.

넷째, 한중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중재 능력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자기 희망적 해석을 자제하는 동시에 북중관계의 구조적 특성과 중국이 의도하는 북한체제의 미래상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력을 과신할 경우 의도치 않게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상호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중국의 ‘능력’과 ‘의지’가 합치될 때만 가능하며 어느 경우에도 그들의 ‘핵심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다.

결국 한중 전략적 협력의 강화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과정에 유용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양국 신지도부의 우호협력적 분위기에 불구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의 구조적 한계가 상존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집권 초기의 기대와 이상에 경사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대내외적 노력과 이에 대한 이해 당사국들의 긍정적 호응 여부가 한중 전략적 협력의 수준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하게 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문흥호. “후진타오 집권기 중국의 대 북한 인식과 정책: 변화와 지속,” 김연철 외, 『북한, 어디로 가는가?』(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 \_\_\_\_\_. “한일관계의 미래와 중국 요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양립 가능성 모색,” 하영선, 오코노기 마사오(편), 『한일 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서울: 한울, 2012).
- 박인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이론적 접근 및 국제화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2013).
- 時永明. “일본의 정치 우경화가 중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균 차이나 브리프』, 제1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이기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Online Series 2013-02-25*, 통일연구원.
- 조영남. 『중국의 꿈: 시진핑의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서울: 민음사, 2013).
- 주철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신협력 시대,” *JPI Peace Net*, No. 2013-19, Jeju Peace Institute, August 07, 2013.
-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13).
- “한중공동성명”(中韓聯合公報), 『한중 수교20주년 한중간 주요 연설 및 문헌집 1992-2012』(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12).
- EAI 안보넷. “미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대북공진독트린과 한중정상회담의 과제,” 『EAI 논평』 제29호(2013. 6. 25).
- Jane Perlez and Chris Buckley. “China suggests that U.S., projecting power, is stirring Asia-Pacific tension,” *The New York Times*, April 16, 2013.
- Jackie Calmes and Steven Lee Myers. “U.S. and China move closer on North Korea, but Not on Cyber espionage”, *The New York Times*, June 8, 2013.
- Yu Hyun-seok. “Understanding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JPI Peace Net*, No. 2013-21, Jeju Peace Institute, September 13, 2013.

『人民日報』, 2013. 6. 28. 『人民日報』, 2013. 10. 8.

[논문투고일: 2013. 09. 28]

[심사의뢰일: 2013. 10. 14]

[게재확정일: 2013. 11. 02]